

# 신천지예수교회 “한기총, 회개하고 신천지에 사과하라”

## 역사적 과오 · 범죄행위 조목조목 지적하며 회개 촉구 국민 목숨 앗아간 강제개종 사업 즉각 중단 요구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대표되는 기성교단이 저지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반사회적·반국가적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1일 성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성교단 소속 목사들의 강제개종 사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의적인 이단 규정과 살인을 부르는 종교적 핍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명서에서 “한기총 등 기성교단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창립 아래 36년 동안 인신공격과 핍박,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심지어 개종을 한다며 지난 2007년과 2018년 신천지예수교회의 두 여성 성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의 주류 교단인 장로교를 비롯한 주요 교단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했고, ‘조선장로호’라는 전투기까지 일본에 헌납하며 우리나라 청년들의 강제징용에도 앞장섰다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이들 교단이야말로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주의자들이란 게 신천지예수교회의 주장이다.

또 장로교단은 독재정권의 3선개헌과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으며, 한기총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를 무수히 자행해온 사실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종교를 가장한 이러한 위장단체가 지금도 척결되지 않고 정치세력화해 오늘 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들이 바로 기성교단을 대표하는 한기총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한기총 등 기성교단이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과 용서와 진리를 믿지 않고, 평화를 선포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전쟁을 선포 했고 살인을 초래하는 강제개종을 자행했다며 이들이 바로 최고의 이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내 성도들의 마음에 심은 것은, 거짓말쟁이 마귀의 씨를 심어 마귀 자식이 되게 한 것이니, 이 또한 최고의 이단행위라고 신천지예수교회는 강조하고 있다.

한기총은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신천지예수교회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갖다 버리게 했고, 조국통일선언문 비석도



▲ 지난 6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광주시 금남로에서 강제 개종 피해자故 구지인씨 1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강제 개종을 자행하는 한기총 등 기성교단을 규탄했다.

뽑아 버리게 했으며 자원봉사도, 현충일 행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한기총이 위장 종교단체란 사실은 대표회장 선거에서 돈으로 회장 자리를 사고팔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증됐고, 목사안수증까지 매매하는 지경이라며 이들을 과연 종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단상담사를 자처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은 납치·감금·폭력을 동반한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죽게 한 사건이 2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 뒤에 숨어서 가족을 사주하면서도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기총 등 기성교단 목사들은 최근 10년간 약 1만 2천 명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죄명을 보면 살인·사기·횡령·성폭행 등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죄는 모두 범하고 있어, 사실상 범죄집단이란 비판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 집단은 한기총 등 기성교단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들이 오히려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사이비’라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설명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한기총이 저지른 영·육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라며 “이제 회개하고 신천지예수교회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친일파였던 장로교단 중심의 한기총과 하나 되어, 죄 없는 신천지예수교회의 건축, 평화행사, 문화행사를 방해한 관공서 공무원, 정치인, 기독교 언론 인도회개하라”고 강조했다. 순천·광양=김승호·황경석 기자